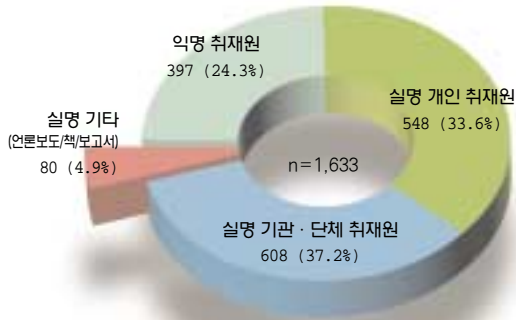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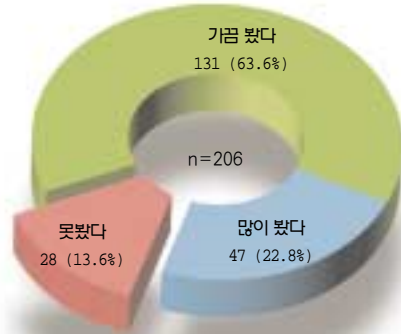


지면분석_취재원 인용 비율



기자조사_최근 한달사이 적절하지 않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가?



기자들의 80.5%가 현재 우리언론의 익명보도가 많은 편이며, 64.4%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면분석의 결과, 신문에 나타난 취재원 가운데 기관·단체 취재원을 제외할 경우 익명 취재원 인용 횟수는 42%로 기사 한건당 0.76명에 달했다.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가 익명

10대 일간지 지면분석과 기자 의견 조사

조동시·양승혜 기자

기자들의 80.5%가 현재 우리언론의 익명보도가 많은 편이며, 64.4%가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들은 또한 익명 취재원 사용이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데 85.8%가 동의하지만, 63%는 그로 인해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지면분석의 결과, 신문에 나타난 취재원 가운데 익명의 취재원은 기사당 평균 0.48명으로, 전체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가운데 2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단체 취재원을 제외할 경우 익명 취재원 인용 횟수는 42%로 기사 한건당 0.76명에 달했다.

이는 월간 <신문과방송>의 기자의견조사와 신문지면 분석 결과다. 지면 분석은 2005년 12월 이후 발행된 10개 전국지로 가상 일주일(첫주 월요일자, 둘째주 화요일자 등)치를 만든 다음, 화·목·토요일자(2005년 12월 5일자, 12월 22일자, 2006년 1월 7일자)의 1면과 2면, 사회·경제·스포츠·문화 각 1면 등 6개 면(총 108면)을 대상으로 했다. 문화면의 경우 '문화'로 표기된 면이 없는 일부 신문은 공연, 학술·종교면을 분석했다.

기자의견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한국언론재단 인명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있는 전국의 기자 7,593

명에게 1월 18·19·20일에 이메일로 보내 1월 24일 오후 5시까지 답신한 206명의 응답을 SPSS를 이용해 분석했다. 메일을 열어본 기자는 1,139명이었다. 응답자는 소속별로 신문사 144명, 방송사 45명, 인터넷 등 기타가 15명이다. 직급별로는 평기자 104명, 차장급 54명, 부장급 이상 46명이고 연령대는 20대가 10명, 30대가 93명, 40대가 81명, 50대 이상이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는 116명, 서울 외 지역 응답자는 88명으로 나누어진다.

기사당 평균 취재원 1.99명

먼저 신문지면 분석 결과를 보면 10개 신문 3일치 6개 면(180면)에 실린 총 기사건수(기사안내 제외)는 1,086건으로 지면당 평균 6건의 기사가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 가운데 사진기사와 통신기사, 사고, 단순안내성 기사를 제외한 820건에 대해 취재원이 인용된 건수를 실명과 익명으로 나눠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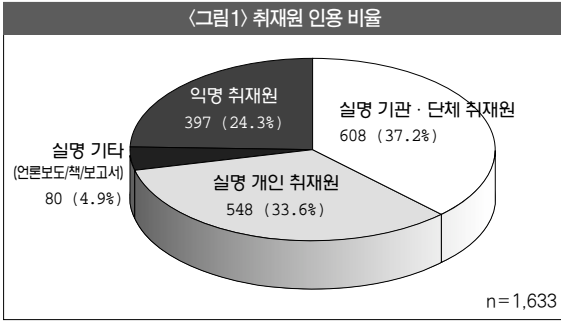
그 결과 820개 기사에 모두 1,633명의 취재원이 등장해 1개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수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명으로 등장한 취재원은 1,236명(75.7%), 익명은 397명(24.3%)이었다(표2) <그림1>.

(표1) 분석대상 신문기사 건수

지면	종합1면		종합2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면		문화면		합계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전체	분석대상
경향신문	16	12	18	16	18	13	11	10	17	12	10	9	90	72
국민일보	19	13	20	11	19	16	28	20	26	20	14	8	126	88
동아일보	13	11	19	14	12	11	20	16	14	11	14	10	92	73
문화일보	17	11	22	21	19	15	20	16	25	18	11	6	114	87
서울신문	16	12	21	6	26	21	22	19	27	19	11	11	123	88
세계일보	16	13	17	13	20	16	20	18	23	17	13	10	109	87
조선일보	15	10	21	14	18	16	18	15	19	13	11	7	102	75
중앙일보	16	12	20	15	16	15	21	20	17	8	13	10	103	80
한겨레	11	8	17	11	21	20	18	15	28	18	14	13	109	85
한국일보	16	12	22	18	16	13	19	13	25	18	20	11	118	85
합계	155	114	197	139	185	156	197	162	221	154	131	95	1,086	820

*분석에서 제외된 기사: 통신기사, 사진기사, 그래픽/만평, 사고/안내성기사, 외부필자 기사
 *2005.12.6(화), 22(목), 2006.1.7(토). 사회·경제·스포츠·문화면은 해당 섹션 1면.

〈그림1〉 취재원 인용 비율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수를 지면별로 보면 종합1면 기사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면(2.39명), 종합2면(2.16명)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면은 0.95명으로 상대적으로 취재원 수가 적었는데 이는 경기 내용을 스케치하거나 해설하는 기사가 많았

원으로 한 기사는 80회(6.5%)였다. 지면별로 보면 스포츠·문화면은 개인이 취재원으로 많이 등장한 반면, 다른 면은 기관 이름을 밝힌 경우가 많았고 종합2면은 기관과 개인이 비슷하게 등장했다.

기관 취재원의 인용 횟수(608회)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212회(34.9%) 인용돼 가장 많았으며, 기업체(129회), 시민·이익·종교단체(126회), 검찰·경찰(66회) 순으로 자주 등장했다. 그밖에 학교·연구기관(37회), 국회·정당(14회), 기타(24회)로 집계됐다. 신문별로는 대부분의 신문에서 정부기관이 인용 취재원 1위를 차지했으나, 서울신문은 시민·이익·종교단체가, 한겨레는 기업체와 시민·이익·종교단체가 공동 1위를 차지해 다른 신문과 차이

820개 기사에 모두 1,633명의 취재원이 등장해 1개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수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명으로 등장한 취재원은 1,236명(75.7%), 익명은 397명(24.3%)이었다. 기사당 평균 취재원 수를 지면별로 보면 종합1면 기사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 때문이다. 신문별로는 중앙일보가 2.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향신문(2.11명)과 서울신문(2.03명) 순이었으며 국민일보(1.80명)와 한국일보(1.78명)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가운데 취재원을 실명으로 밝힌 기사 비율은 한겨레가 8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조선일보(77.7%), 경향신문(77.6%) 순이었다. 지면별로 보면 스포츠면(94.6%)과 문화면(93.4%)이 특히 많았으며 경제면(69.0%)과 사회면(69.4%)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부기관이 기관 취재원의 34.9%

실명 취재원의 인용 횟수는 기관·단체인 경우가 608회로 전체 실명 취재원(1,236) 가운데 49.2%였고, 개인은 548회(44.3%)로 단체·기관보다 조금 적게 나타났다. 그밖에 다른 언론보도나 책·보고서를 취재

를 보였다. 지면별로 보면 종합1,2면·경제면·사회면은 정부기관을, 스포츠면과 문화면은 각각 기업체와 시민·이익·종교단체를 취재원으로 가장 많이 인용했다. 스포츠면에서 기업체가 많은 이유는 각종 구단을 기업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실명으로 기사에 등장한 횟수는 모두 548회로 기사당 0.67명이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공직자(공무원)가 120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스포츠·종교인(110회), 대학교수 등 전문가(100회), 단체대표(68회), 기업인(60회), 일반개인(60회) 등의 순이었다. 신문별로는 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가 공직자(공무원)가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경향신문은 예술·스포츠·종교인,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전문가, 세계일보와 한겨레는 단체대표가 가장 많이 지면을 장식했다. 지면별로는 지면의 성격을 반영해 종합면은 공직자(공무

〈표2〉 신문별/지면별 기사 건수 및 취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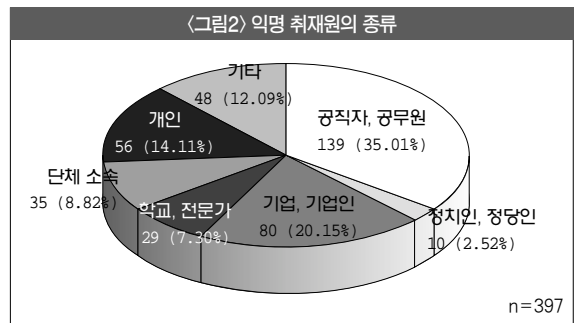
신문	기사건수(취재원 안배한 기사건수)		전체 취재원		실명 취재원			기관 실명 취재원		개인 실명 취재원		실명 기타(언론보도/책/보고서)		익명 취재원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
경향신문	72	(12)	152	2.11	118	1.64	(77.6)	45	0.63	63	0.88	10	0.14	34	0.47	(22.4)
국민일보	88	(20)	158	1.80	116	1.32	(73.4)	55	0.63	51	0.58	10	0.11	42	0.48	(26.6)
동아일보	73	(12)	146	2.00	108	1.48	(74.0)	46	0.63	58	0.79	4	0.05	38	0.52	(26.0)
문화일보	87	(15)	171	1.97	125	1.44	(73.1)	58	0.67	61	0.70	6	0.07	46	0.53	(26.9)
서울신문	88	(14)	179	2.03	134	1.52	(74.9)	72	0.82	55	0.63	7	0.08	45	0.51	(25.1)
세계일보	87	(21)	170	1.95	125	1.44	(73.5)	72	0.83	46	0.53	7	0.08	45	0.52	(26.5)
조선일보	75	(9)	148	1.97	115	1.53	(77.7)	59	0.79	49	0.65	7	0.09	33	0.44	(22.3)
중앙일보	80	(9)	192	2.40	145	1.81	(75.5)	65	0.81	70	0.88	10	0.13	47	0.59	(24.5)
한겨레	85	(16)	166	1.95	137	1.61	(82.5)	70	0.82	55	0.65	12	0.14	29	0.34	(17.5)
한국일보	85	(18)	151	1.78	113	1.33	(74.8)	66	0.78	40	0.47	7	0.08	38	0.45	(25.2)
전체	820	(146)	1,633	1.99	1,236	1.51	(75.7)	608	0.74	548	0.67	80	0.10	397	0.48	(24.3)
종합1면	114	(7)	336	2.95	255	2.24	(75.9)	146	1.28	102	0.89	7	0.06	81	0.71	(24.1)
종합2면	139	(11)	300	2.16	217	1.56	(72.3)	100	0.72	103	0.74	14	0.10	83	0.60	(27.7)
사회면	156	(10)	373	2.39	259	1.66	(69.4)	149	0.96	105	0.67	5	0.03	114	0.73	(30.6)
경제면	162	(14)	326	2.01	225	1.39	(69.0)	134	0.83	81	0.50	10	0.06	101	0.62	(31.0)
스포츠면	154	(73)	147	0.95	139	0.90	(94.6)	40	0.26	72	0.47	27	0.18	8	0.05	(5.4)
문화면	95	(31)	151	1.59	141	1.48	(93.4)	39	0.41	85	0.89	17	0.18	10	0.11	(6.6)

원), 경제면은 기업인이었으며, 사회면은 일반개인이 가장 많이 인용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실명 취재원 가운데 기관·단체가 기사에 더 많이 등장했으나, 경향신문(기관·단체 45회:개인 63회)과 동아일보(46:58), 중앙일보(65:70) 등 세 신문은 개인의 실명 취재원이 더 많게 나타났다. 지면에서는 스포츠면과 문화면이 개인을 기관·단체보다 더 많이 기사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은 공직자가 35%

익명의 취재원은 397회 인용돼 기사당 0.48건을 기록했다. 이를 직업별로 보면 공직자(공무원)가 139회 인용돼 익명 취재원 가운데 가장 많은 35%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기업인(80회), 일반개인(56회), 시민·이익·종교단체소속(35회)의 순이었다(그림2). 또한 대부분의 신문이 공직자(공무원)를 익명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데 반해, 한국일보는 기업인이 가장 많았다. 지면별로는 지면의 성격을 반영하듯 종합면과 사회면은 공직자(공무원), 경제면은 기업인이 가



장 많았다.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표현은 '관계자'가 142회로 익명 전체 397회 가운데 35.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오모씨'로 32회(8%)였다. 그밖에는 기사 내용에 따라 '한 검사' '한 여당의원' '한 오락실 업주' '시민단체' 등 직업이나 직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됐다.

일부 눈길을 끄는 표현도 있었다. '정통 기독교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 '인터넷 운영자', '검찰 안팎', '학교명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공연계 인사들' 등이 그것이다. 또 앞에서 관계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 다른 관계자'라는 표현을 쓴 기사

도 있었는데 이는 익명의 관행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밖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하다고 말했다.”는 인용문도 눈에 띄었는데, 전문가들이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말했다 하더라도 겹따옴표 안에 쓸 정도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말했는지는 의문이다.

기관 실명 제외하면 익명 취재원 42%

한편 분석대상 기사 820건 가운데 기관·단체만 취재원으로 사용한 기사는 154건(18.8%),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기사는 146건(17.8%)이었다. 기관·단체만 취재원으로 사용한 기사는 해당 기관·단체의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 기사를 작성했다는 가

이일보(39.6%)의 익명 사용이 낮은 편이었으며, 세계일보(49.5%)와 한국일보(48.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사당 등장하는 개인 실명과 익명 취재원 수는 기관·단체 취재원을 포함했을 경우(1.99명)보다 낮은 1.82명이었다. 신문별로도 기관·단체 취재원을 포함했을 경우와 차이를 보여 동아일보가 기사당 2.09명이 취재원으로 등장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문화일보(2.02명)였다. 지면별로는 사회면(2.13명)과 종합1면(2.01명)에서 개인 실명과 익명의 취재원 인용 수가 많았다.

요컨대 종합1면과 사회면이 다른 면에 비해 취재원 인용빈도가 많았고, 스포츠면과 문화면은 익명 취재

기관·단체만 취재원으로 사용한 기사는 제외하고 실명의 개인 취재원이나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 520건(전체의 63.4%)을 대상으로 실명과 익명의 등장 빈도를 살펴본 결과, 실명이 58%, 익명이 42%로 나타나 익명 취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하에 제외하고 실명의 개인 취재원이나 익명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 520건(전체의 63.4%)을 대상으로 실명과 익명의 등장 빈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실명이 58%, 익명이 42%로 나타나 익명 취재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표3).

이를 지면별로 보면 경제면과 사회면의 익명 취재원 등장 빈도가 각각 55.5%와 52.1%로 절반을 넘었으며, 기사당 익명의 취재원 수는 평균 0.76명이었고, 경제면(0.99명)과 사회면(1.11명)이 다른 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면을 제외한 다른 5개면은 개인 실명 인용이 기사당 1명을 넘었으나 경제면은 0.79명으로 나타나 사회면과 함께 개인 실명보다 익명 취재원이 좀 더 많이 등장했다.

반면 스포츠면(10.0%)과 문화면(10.5%)은 익명의 취재원이 각각 0.12명과 0.17명으로 매우 적었다. 신문별로는 한겨레(34.5%)와 경향신문(35.1%), 동

원 수가 다른 면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기업체와 권력기관이 문화·예술인·운동선수보다 익명으로 더 많이 인용된다는 사실은 취재원과 언론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정부의 브리핑제 실행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과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 2명만이 기사에 인용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양적 분석이기 때문에 취재원 수가 많은 신문이 반드시 다양성이나 균형있는 보도를 하는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질적인 분석을 통해 취재원 수와 기사의 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에 도움”

기자 의견조사 결과(표4), 익명의 취재원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

〈표3〉 신문별/지면별 개인 실명·익명 취재원 분석

신문	기사건수	개인 실명+익명 취재원		개인 실명 취재원			익명 취재원		
		취재원수	평균	취재원수	평균	비율	취재원수	평균	비율
경향신문	52	97	1.87	63	1.21	(64.9)	34	0.65	(35.1)
국민일보	57	93	1.63	51	0.89	(54.8)	42	0.74	(45.2)
동아일보	46	96	2.09	58	1.26	(60.4)	38	0.83	(39.6)
문화일보	53	107	2.02	61	1.15	(57.0)	46	0.87	(43.0)
서울신문	56	100	1.79	55	0.98	(55.0)	45	0.80	(45.0)
세계일보	49	91	1.86	46	0.94	(50.5)	45	0.92	(49.5)
조선일보	44	82	1.86	49	1.11	(59.8)	33	0.75	(40.2)
중앙일보	62	117	1.89	70	1.13	(59.8)	47	0.76	(40.2)
한겨레	50	84	1.68	55	1.10	(65.5)	29	0.58	(34.5)
한국일보	51	78	1.53	40	0.78	(51.3)	38	0.75	(48.7)
전체	520	945	1.82	548	1.05	(58.0)	397	0.76	(42.0)
종합1면	91	183	2.01	102	1.12	(55.7)	81	0.89	(44.3)
종합2면	96	186	1.94	103	1.07	(55.4)	83	0.86	(44.6)
사회면	103	219	2.13	105	1.02	(47.9)	114	1.11	(52.1)
경제면	102	182	1.78	81	0.79	(44.5)	101	0.99	(55.5)
스포츠면	68	80	1.18	72	1.06	(90.0)	8	0.12	(10.0)
문화면	60	95	1.58	85	1.42	(89.5)	10	0.17	(10.5)

〈표4〉 익명의 취재원 사용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취재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5(2.4)	9(4.4)	15(7.3)	114(55.6)	62(30.2)	205(100.0)	4.07
고발성 사회감시 기사를 쓰기에 용이하다	4(2.0)	14(6.8)	20(9.8)	127(62.0)	40(19.5)	205(100.0)	3.90
기사의 제보를 받는 데 용이하다	4(2.0)	10(4.9)	22(10.7)	114(55.6)	55(26.8)	205(100.0)	4.00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5(2.4)	28(13.7)	43(21.0)	94(45.9)	35(17.1)	205(100.0)	3.61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11(5.4)	89(43.6)	46(22.5)	49(24.0)	9(4.4)	204(100.0)	2.78
취재원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5(2.4)	43(21.0)	35(17.1)	101(49.3)	21(10.2)	205(100.0)	3.44
사실과 소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7(3.4)	39(19.1)	47(23.0)	85(41.7)	26(12.7)	204(100.0)	3.41
한국 언론보도에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많다	3(1.5)	12(5.9)	25(12.2)	117(57.1)	48(23.4)	205(100.0)	3.95
한국 언론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줄여야한다	3(1.5)	36(17.6)	34(16.6)	107(52.2)	25(12.2)	205(100.0)	3.56

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물었을 때 '취재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의견('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이 85.8%, 평균점수로는 4.07였다. 그 외 익명보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발성 사회감시 기사를 쓰기에 용이하다'(81.5%, 평균 3.90), '기사의 제보를 받는 데 용이하다'(82.4%, 평균 4.00)에 모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익명보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평균 2.78)를 제외하고 모두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신뢰성

이 떨어진다'가 3.61점으로 높았고, '취재원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3.44), '사실과 소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3.41)에도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한편, '기사의 신뢰성'과 관련해, '일반적인 취재원리에 근거한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답한 기자 그룹(3.65)과 '특별한 기준이 없다'(4.14)는 그룹이 '회사나 언론단체 취재윤리강령(보도준칙)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3.04)보다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5점:매우 그렇다)에 높은 점수(전체 평균 3.61, $f=4.993$, $p<.01$)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

서 활동하는 기자들(3.73)이 서울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3.44)보다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에 높은 점수($t=2.102, p<=.05$)를 줬다.

또,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실명을 밝히자고 요구한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항상 요구하는 그룹'(3.85)이 '가끔 요구하는 그룹'(3.27)이나 '요구하지 않는 그룹'(3.27)보다 '사실과 소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5점:매우 그렇다)에 높은 점수를 줬다(전체 평균 3.43, $f=6.756, p<=.001$). 즉 취재원에게 실명을 밝히자고 항상 요구하는 기자들이 익명 취재보도가 사실과 소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한다고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익명보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표5〉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이유(3순위 복수선택)

	응답 수	응답률(%)
취재원 보호를 위해	162	79.0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해	120	58.5
취재원으로부터의 항의,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74	36.1
사실 확인이 미흡하거나 간접 취재원(혹은 타매체)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서	72	35.1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익명 취재원을 통해 말할 수 있어서	55	26.8
취재원을 섭외하기가 편리해서	45	22.0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42	20.5
기타	5	2.4
데스크나 간부가 익명을 요구	3	1.5
합계	578	281.9

*응답자 수: 205명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균 3.96, $f=4.608, p<=.01$).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줄여야 하

최근 한달 사이 적절하지 않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를 보았다는 경우가 86.4%로 못 봤다(13.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취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익명을 사용한 느낌'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12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경우'(4.14)가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3.42), '회사나 언론단체 취재윤리강령(보도준칙)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3.08), '개인 기준과 단체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3.33)보다 더 '사실과 소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5점: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균 3.42, $f=4.676,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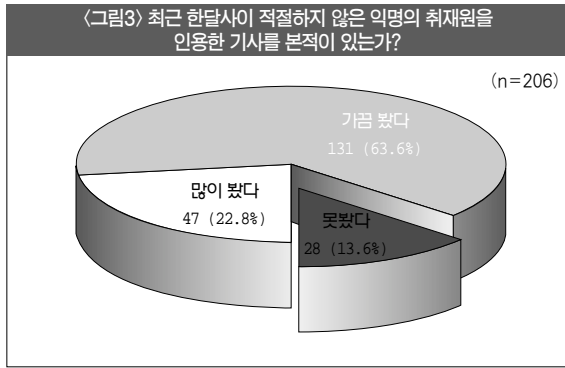
익명보도 줄여야 64.4%

한편 '한국 언론보도에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많다'에 80.5%나 동의했다(평균 3.95). '한국 언론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4.4%(평균 3.56)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익명보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4.43)가 '회사나 언론단체 취재윤리강령(보도준칙)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3.52)보다 한국 언론에 익명 취재원의 사용이

다는 데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4.00)가 '회사나 언론단체 취재윤리강령(보도준칙)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3.24)보다 더 많이 찬성했다(전체 평균 3.57, $f=2.951, p<=.05$).

익명 취재원 사용의 추세에 대해서는 50.5%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증가와 감소추세라는 응답은 모두 21.4%였다. 감소 또는 증가 추세라 느끼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으로 묻은 결과, 감소추세라는 응답자는 '기사의 신뢰성 향상' '실명을 밝히는 사회 분위기' '기자의 노력'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증가세라고 응답한 기자는 '소송' '익명의 제보' '기자의 의도' '부실취재' '정부의 언론 대응'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에게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표5). 3순위까지 고르도록 했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서라고 답한 경우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다(전체 응답자 중 79%가 선택). '취재원이 익명을 요구해'(120명, 58.5%)도 절반이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취재원으로부터의 항의,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서'(74, 36.1%), '사실 확인이 미흡하거나 간접 취재원(혹은 타매체)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서'(72, 35.1%)의 순서로 많게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은 익명보도 봤다 86.4%

한편, 기자들에게 최근 한달 사이 적절하지 않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보았다는 경우가 86.4%('가끔 봤다' 63.6%, '많이 봤다' 22.8%)로 '못봤다'(13.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3).

그 이유는 '실명을 밝혀도 될 만한데,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취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익명을 사용한 느낌'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112명(62.9%)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실 확인이 덜 되어'는 78명(43.8%), '타매체 보도를 재인용했거나 간접 취재원을 통해 들은 내용'이 58명이었다. '회사의 편집방향에 맞추기 위해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한 느낌이 든다'는 데 대해서도 53명이 지적했다(표6).

지면분석을 하면서 추출한 익명의 취재원 표현들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있는대로 고르게 했을 때에는 '소식

(표6) 익명의 취재원 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복수선택)

	응답 수	응답률(%)
실명을 밝혀도 될 만한데,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 같다	112	62.9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취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익명을 사용한 느낌이 든다	112	62.9
사실 확인이 덜 되어 익명으로 처리한 것 같다	78	43.8
타매체 보도를 재인용했거나 간접 취재원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 익명으로 쓴 것 같다	58	32.6
회사의 편집방향에 맞추기 위해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한 느낌이 든다	53	29.8
기타	4	2.2
합계	417	234.2

*응답자 수: 178명

(표7) 익명 취재원의 표현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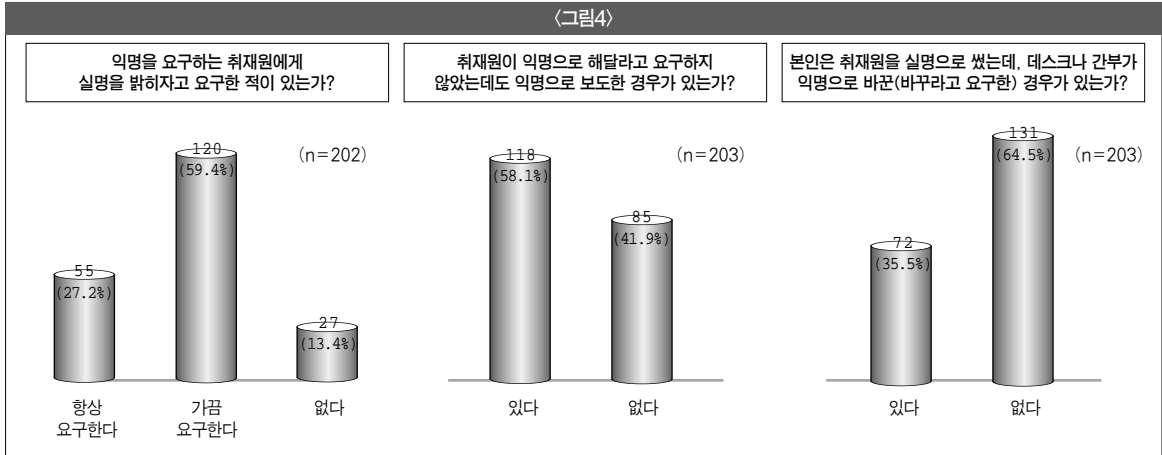
	응답 수	응답률(%)
소식통	127	62.9
일각	125	61.9
관계자	91	45.0
알려졌다(전해졌다)	89	44.1
전문가	73	36.1
업계	72	35.6
당국자	65	32.2
O모(아무개)씨	56	27.7
네티즌(인터넷 게시판, 댓글)	53	26.2
O측(쪽)	49	24.3
직업만 밝히는 경우	40	19.8
기타	5	2.5
합계	845	418.3

*응답자 수: 202명

통'(127명, 62.9%), '일각'(125, 61.9%)이 응답자의 50% 이상이 선택한 표현들이었다. 다음으로 '알려졌다 또는 전해졌다'(88명), '전문가'(73명)를 꼽았고, 최근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네티즌, 인터넷 게시판(댓글)'에 대해서는 53명만이 문제있는 표현이라고 응답했다(표7).

또 기자 자신들이 많이 쓰는 익명 취재원 표현이 무엇인지 개방형으로 쓰게 했다. 지면분석에서 익명의 취재원에 대한 표현으로 '관계자'가 가장 많이 등장(397개 익명 취재원 중 142개, 35.8%)했는데, 실제 기자 자신들도 '관계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146명). 다음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O모씨'(37명)였고, '전문가'(18명), '당국자'(16명), '업계'(12명) 등을 들었다.

(그림4)



한편, 최근 한달동안 쓴 기사 수는 평균 51.54건이었고, 만난 취재원 수는 41.76명(한건당 0.81명), 그

도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가 있는가'에는 '있다'가 58.1%(118명)로 '없다' 41.9%(85명)보다 약간 많았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실명을 밝히자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4%가 '가끔 요구한다', 27.2%가 '항상 요구한다'고 답했다. '취재원이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가 있는가'에는 '있다'가 58.1%로 '없다' 41.9%보다 약간 많았다.

가운데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 수 36.37명(한건당 0.71명), 익명으로 인용된 취재원 수 12.6명(한건당 0.24명)이었다. 지면분석에서 나타난 평균 취재원 수(1.99명)나 익명 취재원 수(0.48명)보다 훨씬 적게 기사에 인용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보도 일반에서는 익명보도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자신은 익명 취재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취재원에게 실명 요구 59.4%

다음으로 취재경험이 있는 기자들에게 익명 처리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했다(그림4). 우선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실명을 밝히자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59.4%인 120명이 '가끔 요구한다', 27.2%인 55명이 '항상 요구한다'고 답했다. '취재원이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 '본인의 기사에서는 취재원을 실명으로 썼는데, 데스크나 간부가 익명으로 바꾼(바꾸라고 요구한) 경우가 있는가'에서는 33.5%(72명)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한 실례로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이었던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팀장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는 "취재원의 인터뷰 동의는 실명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사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내가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위원'으로 보도됐다. 그 기사를 본 다른 위원들이 '누가 고자질쟁이인가'라는 식으로 말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내가 평소 회의에서 주장한 바를 그대로 말한 것이다. 익명은 취재기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해명해야 했다."며 "익명 보도 관행이 지나치게 만연돼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익명 보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재윤리에 근거한 개인적인 기준'이 가장 많은 81명(39.3%)이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기준과 윤리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의견이 78명(37.9%), '회사나 언론단체 취재윤리강령(보도준칙) 준수'가 25명(12.1%)이었고,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자도 21명(10.2%)에 달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게 실명으로 쓰자고

요구했던 경험이 있는 기자들은 요구하지 않았던 기자들보다 취재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기사에 익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1.541$, $p<=.05$). 또한 간부로부터 익명 요구를 경험한 기자들은 경험하지 않은 기자들에 비해 취재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익명 보도를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chi^2=4.213$, $p<=.05$). ●

익명보도에 대한 기자 의견과 신문사 심의 사례

(기자 의견)

△최근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입장이 엄격해 사건 기사의 경우 실명게재에 위험 부담이 많다. 보도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빚어질 명예훼손문제가 불거질 것이 우려돼 곤란을 많이 느낀다. 특히 데스크에서는 과도하게 실명(관련 업체)을 요구해(특히 성폭력문제)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언론의 구태의연성, 즉 관행과 게으름이 문제이고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젊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말만 앞서고 개선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앙 정치 기사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내용을 보도 하면서 '...에 따르면' 식 기사는 피해야 한다고 봄. 관심은 끄는 것 같으나 내용이 대개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때가 많아 혼란스럽다. 독자나 시청자 판단을 왜곡시킨다고 본다. 이것은 감히 죄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고발은 물론 미담기사도 익명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다. 누구를 도왔다고 하면 각종 관변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도와달라고 난리치기 때문이다. 언론이 호의적 기사를 써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발목이 잡히는 것을 수도 없이 봤다.

△공무원들의 경우 취재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관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자체나 위아래사람은 물론 국회 다른 부처 사람들 등 여기저기 눈치보는 데가 많은 데다 무사안일이 몸에 배어 있어 그런 듯하다. 혹여라도 관행에서 벗어나 실명을 막아버리면 바로 항의 전화가 온다. 별다른 중요도가 없어 보이는 멘트에 대해서

도 말이다.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사를 써야 하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익명을 쓰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과중한 기사 부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마감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편법을 선택하는 셈이다. 기자가 자기 입맛대로 기사를 쓰기 위해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남용하는 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상에서 쏟아지는 뉴스와 업무부담에 허덕이는 기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익명의 취재원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싶다. - 김형구 세계일보 경제부 기자

△모사의 외교안보 기자가 '한 전문가에 따르면'이라고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그게 누구였냐고 묻자 "그거..., 나지 뭐."라고 얘기해 황당했던 일.

△비리보도의 경우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취재원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보도가 나간 이후 보도관련 경위서는 물론 징계까지 거론되면서 인사피해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실명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명을 써야하는 불가피함이 존재한다. 이 모순된 상황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향후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 전상천 경기일보 사회부 기자

△실명으로 기사를 썼다가 취재원의 요구로 시내판에서 익명으로 바꾼 경우가 있음. 정부 연구를 의뢰받은 학자였는데 해당부처가 취재원에게 압박을 가한 탓에 익명처리. △언론에서 보도라도 되면(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지적

에도) 보도 대상이 된 공직사회 등 대부분 조직사회가 제보자 색출에 나서 린치를 가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내부고발자가 금세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언론의 정당한 지적과 비판에 대해 조직사회의 성숙한 대응이 무조건적 익명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강은 세계일보 기자

△외국 언론의 경우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으로 대리급 등도 인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기사의 신뢰성 향상차원에서 낮은 직급의 실명을 인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이 경우 낮은 직급 대신 익명으로 처리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사례도 빈번함.

△요즘은 취재원이 언론의 약점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언론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익명을 요구한다. 취재원에 따라서는 이 점을 너무 잘 활용하는지라 이용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늘 우려된다.

△연구비리와 학위매매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교수들마저 실명으로 처리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해 범법 교수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다른 교수들처럼 교수집단으로 숨어 버리고 대학교수 전체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사회적 책임이 크고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가 수사단계가 아닌 공판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마땅히 이를 실명화하고 검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언론이 사회의 불신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문사 심의사례〉

△보도자료를 정부기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정보제공자들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한 간부(또는 관계자)는' 또는 '가나식품회사의 한 관계자'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재정경제부의 홍길동 예산실장은' '가나 식품회사의 김길동 연구개발실장은' 식으로 보도해야 한다.

△자신의 기획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었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이른바 관심 끄는 단독기사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 취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 관계자' 식으로 완전 익명처리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기관 등과 직위 등을 밝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기관의 한 국장급 간부는'

또는 '환경부의 한 국장(과장)급 간부는' 식으로 보도해야 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흔히들 자기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대체적인) 지적이다'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면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사례들 가운데 실제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기자 자신의 생각을 마치 전문가들한테서 들은 말인 것처럼 표현해 독자들을 속이는(우롱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당당하게 'OOO 교수는 지적했다' 식으로 실명처리 하든지, 기자 자신의 분석이나 해석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서울대 교수가 TV토론이나 그의 저서 또는 논문에서 한 이야기를 보고들은 뒤 기사에 옮겨 적으면서 출처는 빼버리고 바로 '홍길동 교수는 ~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해 마치 독자들로 하여금 기자가 그를 직접 접촉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이런 인용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인용한 내용이 문제가 되거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당사자라면 정정기사를 내거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에 걸려 곤욕을 치러야 한다.

△기사 내용에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을 얘기해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것도 전혀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익명으로 기사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그냥 '서울 반포동 가나주유소에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자동차가 밀렸다. 이 주유소 김길동 사장은 ~라고 말했다' 라고 보도하면 될텐데 '서울 반포동 가나주유소에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자동차가 몰렸다. 이 주유소 김길동 사장은 ~라고 말했다' 식으로 익명의 익명을 보도하게 되면 독자들에게 르포의 맛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신뢰성이 매우 약하고 애초부터 음해하려고 마음먹은 극히 질 나쁜 정보제공원(병역비리와 관련한 범법자와 상대방 기업을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악덕 기업 책임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면서 형식적으로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을 정보제공원으로 등갑시켰다. A라는 사람이나 기관이 정보제공원인데도 기사에서는 A를 등장시키지 않은 채 B라는 사람이나 기관이 정보제공원인 것처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신문보도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